

광주서도 소외받는 '광주의 역사'

시 민주보훈과, 올 예산 37억2800만원 중 6% 배정 그쳐 '3·15' '4·19' '광주학생독립운동' 등 충분한 지원 있어야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업 외에도 광주지역 '3·15 의거', '4·19 혁명', '광주학생독립운동' 사업 등에도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인권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시가 최근 '2024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동학혁명과 3·15, 4·19, 광주학생독립운동 등에 대한 예산은 전체의 6%밖에 배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민주보훈과는 올해 총 예산 37억 2800만원을 들여 4개 분야 32개 핵심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 중 3·15 의거, 친일잔재청산, 4·19 혁명 등 5·

18 이외의 개별적인 사건을 다루는 사업은 6개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4·19혁명 역사재조명' 사업(예산 1200만원)은 사진전시회와 추모제만 추진하고, '3·15의거 곡(哭) 민주주의 장송대모 재현행사'(810만원), '자랑스러운 6월 항쟁인 선정'(200만원) 등은 단발성 행사만 열 계획이다.

'4·19혁명기념관 운영'(예산 6500만원), '광주 백범기념관 운영'(1억 2700만원) 등 사업은 단순히 기념관을 민간위탁한다는 내용만 계획서에 포함됐다.

이밖에 예산 1100만원의 친일잔재청산사업까지 포함하면 6개 사업의 총 예산은 2억 2510만원의

로, 전체 예산의 6%에 불과하다.

나머지 94% 중 20억여원(55%)은 5·18 관련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고 5억여원(13%)은 5·18을 비롯해 3·15, 4·19 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괄적인 사업에 투입되며, 9억 7500만여원(26%)은 정부 기념식 등 예산으로 잡혔다.

또 광주학생독립운동의 경우 광주시교육청에서 담당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선양사업을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서에는 '주요 민주역사 시대별 역사정리 및 연구' 사업의 7개 추진과제 중 하나로 언급한 것이 전부였다.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학생독립운동 관련 사업으로 5억 78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논술대회·글짓기대회·문화예술제 등 기념사업을 열고 음악회·영화제, 역사탐방·체험활동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한 것과 대조적이다.

동학혁명 관련 사업 또한 연구 과제 추진과제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을 뿐 선양사업은 이뤄지지 않

는다.

김환호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는 "광주의 민주 역사는 동학혁명에서부터 광주학생독립운동, 3·15, 4·19, 5·18까지 연장선상에 있다. 광주시가 보다 폭 넓게 선양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현재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 사업은 고령이 돼버린 관계자들의 재능기부에만 의존하고 있다. 체계적인 연구와 선양사업 확장,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광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열 4·19민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은 "기념사업회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인지 광주시가 관심을 주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광주역사공원에 설치된 4·19 기념탑에는 현화할 공간조차 없어 추모탑으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추모탑 하나조차 세워주지 않고 있다"며 "광주에서 4·19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해줘야 관심이 모이고 민주성지로서 인식이 더욱 높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 또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서에는 광주시가 '동학혁명에서 촛불혁명까지 광주가 자랑스러운 역사자원이 풍부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5·18민주화운동 이외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재조명과 정신계승에 대한 정책지원 활용 부족'이라고 자체 평가하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이 광주시민에게 갖는 의미와 무게, 역사적 가치가 워낙 큰데다 그동안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도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5·18문제에 치중해 있던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민선 8기 들어 5·18뿐 아니라 전후 역사적 맥락과 사건에 대해서도 중요성이 커졌고, 이들 사건에 대한 시책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민주역사 정리 TF를 가동하고 있다. 민주역사 정리 TF의 연구를 거쳐 기념사업과 사적지 등 현황을 점검하고 진정 필요한 시책을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교직원 한마음 축제가 16일 광주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광주지역 5개 지역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육활동을 하며 친목을 다지고 있다.

한국사립유치원 광주지회 교직원 한마음 축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광주지회(지회장 김상욱·한사협)이 지난 16일 광주대학교 체육관에서 사립유치원 교직원 한마음 축제를 열었다.

행사는 광주유아 교육을 맡고 있는 회원 유치원,

교직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사립유치원의 미래 발전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광주지역 300여 교직원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광주대 김동진 총장, 광주시의회 교육위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교직원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원생들의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심폐소생술 배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한사협은 2018년 출범했으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함께 사립 유치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글·사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대우위니아 체불 사태 정부가 나서달라"

국민청원 2만5천여명 '동의'

박영우 대우위니아 그룹 회장이 300억원대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지만,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자 "정부가 나서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절반을 넘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대우위니아 전 자 및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의 임금체불에 관한 청원"의 글이 지난 2월 28일 올라왔다.

청원 작성자는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와 경영진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임금과 퇴직금 체불 문제로까지 이어졌고 지급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300여원이 넘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직원들의 임금과 더불어 하청업체 대금까지

지 체불되면서 개인의 문제에서 지역 경제까지 흔들리게 하고 있다"며 "임금을 받지 못한 대부분이 재취업이 어려운 중년층이며 어린 자녀들이 있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청원은 17일 오후 6시 기준 2만 5861명으로 목표의 51%를 넘어섰다.

청원에 등록된 뒤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본격 심사가 이뤄진다. 심사 후 채택되면 본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된다.

앞서 지난 7일 박영우 대우위니아 그룹 회장은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 등 계열사 전·현직 대표 이사 3명과 공모해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임금 등의 미지불 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노동자 738명이 피해를 입었다.

/김다민 기자 kdi@

국·공립대 전면 무상등록금제 시행되나

전국 국·공립대총장협 공감대 형성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가 국·공립대 전면 무상등록금제 시행에 공감대를 이뤘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정성택 전남대 총장)는 최근 전남대학교 스토리움에서 열린 올해 첫 정기총회에서 국·공립대학 전면 무상등록금제에 대해 협의했다.

총장들은 무상등록금이 현실화되면 대학 경쟁력 강화와 우수 인재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의회는 국·공립대 무상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는 5000~7000억여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국가장학금 예산 규모의 17% 수준으로,

국가장학금 예산을 활용한다면 일부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무상등록금제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국·공립대 총장들은 또 65세 이상의 석학교수도 초빙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인사말에서 "국·공립대학의 존재 가치는 교육과 연구를 통한 다양한 미래인재 양성과 지속적인 사회 가치를 창출하면서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다"며 "어느 때보다 교육혁신이 요구되는 만큼 공동 운영체인 국·공립대학이 상생과 협력을 통해 품격 있는 고등교육을 위해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정읍시의회

정읍시의회
www.jcc.or.kr